

# 광주 동구·목포·순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 광주 동구·목포시 200억 지원받아 주택·상가 재생

## 순천시는 120억...향동·중앙동 일대 노후 주택 개선

### 내달부터 사업 착수

광주 동구와 목포시, 순천시 등 광주·전남지역 3곳을 포함한 전국 13곳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사업 선도지역 1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달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했으며, 총 86개 신청 지역 중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13개 지역을 근린재생형과 도시경계기반형으로 구분해 선도지역으로 선정했다.

근린재생형에는 광주 동구와 목포시, 군산시, 장로구, 영주시, 창원시 등 일반 규모 6곳과 순천시,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등 소규모 5곳이 지정됐다. 도시경계기반형에는 부산 동구와 충북 청주시 등 2곳이 선정됐다.

근린재생형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려 집체한 중심 시가지지를 회

복하는 사업이다. 일반규모 6곳에는 오는 2017년까지 각각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소규모 5곳에는 각각 120억원(국비 60억원, 지방비 60억원)이 투입된다.

일반규모로 지정된 광주 동구는 충장동과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 일대 폐선부지(푸른길) 인근 노후 주거지 개선과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낡은 상가 재생 사업 등을 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복원동 일대 유달산 주변 구도심의 빈집이나 폐가를 활용해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고, 전복 군산시는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일대를 군산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 역사문화지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재생지구로 선정된 순천시는 향동과 중앙동 등 노후 주거지역 개선 사업과 생태하천, 부유성태 복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이들 13개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착수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체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며, 정부는 총 1400여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칭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1300여억원을 포함하면 총 27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시재생으로는 국내 최대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도시재생 전문기관의 행정·기술 지원도 뒤따른다.

박용 광주시 도시재생사업담당장은 “성공적인 재생사업 추진으로 잠재한 도시는 물론 그 주변까지 사업 효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를 ‘국제안전도시’로

## 시, 2015년 WHO 가입 목표

## 안전 관련 80개 사업 진행키로

광주시가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 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추진한다. 국제안전도시시는 각종 사고, 폭력, 자살,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모든 분야에서 안전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인까지 받아야 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8일 간부회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 과정을 보면서 공인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고 가슴에 새겼다”면서 “광주가 안전한 도시, 믿을 수 있는 도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WHO 국제안전도시 가입을 서두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015년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목표로 안전 관련 8개 분야 8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정신보건, 자살예방, 트라우마 치료 사업 등을 비롯한 알코올 등 각종 중독관리 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초·중등 정신건강 모델학교를 운영하

고, 응급의료 정보센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취약계층 방문보건서비스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교통안전 분야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와 학생교통교육도 강화한다.

교통 혼잡지역과 교통사고 잦은 지역의 교통 체계 개선을 비롯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방식도 대폭 보강한다.

특히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교통약자 전용 택시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노인안전을 위해서는 낙상사고 예방 교육과 시설 확충을 비롯한 노인 돌봄 사업도 확대 지원된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방지를 목표로 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강화되며, 재난 예방 분야, 여성·아동·청소년 분야 등의 안전 사업도 확대 추진된다.

장성수 광주시 안전총괄과장은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목표로 안전 관련 사회 모든 분야의 안전 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으로 보강돼야 한다”면서 “지난 2012년부터 국제 안전도시 지정 사업을 준비해 온 만큼 늦어도 내년부터 안전도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한·중 정상회담 상반기중 개최 추진

## 북핵실험 사전 차단 포석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4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계속 포착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일정을 가능한 한 앞당겨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국가로 꼽히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정부 소식통은 28일 “중국측과 상반기 중에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성격이지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북핵 위기 국면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만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중국 관계 전문가들은 “5월 말 정도에 시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 전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현재 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함께 왕이 부장의 방한 일정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핵 위기 국면 속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한에 적지 않은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반대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다시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국회 진상규명 결의안 제출 28일 국회 의안과에 새정치민주연합 전체(왼쪽부터), 부위원, 김원환, 정호준 의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월 10만원으로 인상

광주시는 28일 “다음달부터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1977가구 중 99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 603가구보다 387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광주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

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2011년 7월 ‘광주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월 8만원씩을 지급해 왔으며, 2012년 7월부터는 생활지원금에 장제비 100만원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송춘근 광주시 5·18선양담당 관계자는 “의료로 사람과 가족이 대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5·18민주유공자의 생활지원금 등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세월호참사 재발방지 ‘수학여행안전법’ 법사위 통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 입출·항 규정 등을 통합하고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작업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는 반드시 선박통항

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토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8일 국회 의안과에 새정치민주연합 전체(왼쪽부터), 부위원, 김원환, 정호준 의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 조선대총동창회 이정남 회장 사의 표명

이정남 조선대총동창회장이 28일 총동창회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25만 동문과 대학 구성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총동창회장직에 대한 모든 공과를 뒤로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12년 10월 제19대 총동창회장 취임사에 밝혔듯이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은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취임 이후 모교와 총동창회 간 원만한 협조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동

문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조선대법원 이사 선임과 관련해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덧씌워진 법적 시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OPEN 30년 전통 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촌**

**유·스퀘어점**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탄다, 주스)

프리미엄 최상급 양념  
· 풍부한 육즙  
· 부드러운 식감  
· 동일가격 대비 2배 이상 신선 재료  
· 친환경 무공해 신선한 재료

**즉석요리**  
얼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

**노가리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28~30cm의 엄선된 수산물로 전량 러시아산의 명태를 강원도 고성 의덕에서 건조하고 가공. 포장한 노가리를 전 국민에게 저렴하게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점이나 점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 술안주로는 최상품이라 자부하는 저희 제품을 적극 권장합니다. **\*생태 동태 명태 코다리...곧 출시예정**

**이렇게 큰 가리비를 이 가격에!!!**  
국내산 가리비보다 크기와 가격에서 압도하는 최상품의 가리비를 착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100%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산물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밖에 대구, 한치, 풍쟁이, 낙지... 있습니다. (주)해감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 할 것입니다.

**배달도 되나요?**  
됩니다. 전국 어디라도 배달합니다. 통신판매, 택배 모두 됩니다. 북한은 안 돼!!!

코메디언 한무가 한일 베이 울고 극찬한 **가리비와 노가리**를 뜯으며 한무가 풀린 노가리(이야기)를 방생했습니다.

**대표전화 : 1899-0618**  
**(062) 654-0633**  
**FAX : (062) 654-0644**

**HG 농업법인 (주)해감농수산**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5-21